

‘내부자 신고 세칙’ 개정(안)

I. 개정 사유

-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*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조항 신설

* '11. 3월 제정, '12. 9월 시행

- 국민권익위, `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반영 요청

(공익신고자 보호법)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·지원

- 신고 주체 : 내부 신고자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신고 가능
- 신고 대상 : 공익관련 180개 법률의 처벌 대상 행위
- 신고 기관 :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관이나 감독기관, 수사기관, 권익위, 국회의원 등

II. 주요 개정내용

-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반영

- 비밀보장 의무, 불이익조치 금지, 인사 우대 등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주요 내용 내규화

- 내부자 신고제도 익명신고 내실화

- (현행) 실명사용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익명신고 가능
- (개정) 익명신고 전제 조건을 폐지하고 익명신고 접수·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

‘내부자 신고 세칙’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 (신 설)	개 정 (안) <u>제1장 총 칙</u>	비 고
<p>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내부통제규정 제10조 및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제6조와 관련, 내부자 신고 <u>제도를</u> 활성화하여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자 신고제도의 운영,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내부자”라 함은 임직원(파견직원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2. “운영조직”이라 함은 내부자 신고의 접수, 조사, 교육, 규정의 제개정 등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조직을 말한다. 3. “비밀보장 의무자”라 함은 내부자 신고의 내용을 접수, 조사하는 자 및 작간접적으로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의 내용 등을 알게 된 내부자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운영조직) 내부자 신고제도를 전담할 운영조직은 법무실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 <p>제4조 ~ 제5조 (기재 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내부통제규정 제10조 및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제6조와 관련, 내부자 신고 <u>및 공익신고</u>를 활성화하여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자 신고제도 <u>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</u>의 운영,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현행과 동일) 2. “운영조직”이라 함은 내부자 신고 <u>및 공익신고</u>의 접수, 조사, 교육, 규정의 제개정 등 내부자 신고제도 <u>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</u>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조직을 말한다. 3. “비밀보장 의무자”라 함은 내부자 신고 <u>및 공익신고</u>의 내용을 접수, 조사하는 자 및 작간접적으로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의 내용 등을 알게 된 내부자를 말한다. 4. “공익침해행위”, “공익신고”, “공익신고자”, “불이익조치”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행위 또는 사람을 뜻한다.</p> <p>제3조(운영조직) 내부자 신고제도 <u>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</u>를 전담할 운영조직은 법무실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2장 내부자 신고제도</u></p> <p>제4조 ~ 제5조 (현행과 동일)</p>	<p>－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신설에 따른 장 구분</p> <p>－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내용 추가</p> <p>－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신설에 따른 정의 추가</p> <p>－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신설에 따른 장 구분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6조(신고방법)</p> <p>① 신고자는 E-Mail, 전화, Fax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되, 신고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, 실명 사용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(신설)</p> <p>제7조 ~ 제18조 (기재 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	<p>제6조(신고방법)</p> <p>① 신고자는 홈페이지, E-Mail, 전화, Fax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되, 신고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.</p> <p>(삭제)</p> <p>② 법무실장은 익명 신고 접수·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 ~ 제18조 (현행과 동일)</p> <p>제3장 공익신고자 보호제도</p> <p>제19조(비밀보장 의무)</p> <p>① 임직원은 공익신고자 및 관련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공익신고자 및 관련자의 인적사항</p> <p>2.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</p> <p>②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한다.</p> <p>제20조(불이익조치 등의 금지)</p> <p>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 임직원이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법무실장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를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임직원에게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.</p>	<p>-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명시</p> <p>- 익명 신고 조건을 폐지하여 익명신고 활성화</p> <p>- 익명 신고접수 제도 수립 의무 부과</p> <p>-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신설</p> <p>- 공익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</p> <p>-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(신설)	<p>제21조(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)</p> <p>① 공익신고를 한 임직원이 전출전입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공익신고를 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,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.</p>	<p>－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 조치</p>
(신설)	<p>제22조(징계의 감면)</p> <p>임직원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－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</p>
(신설)	<p>제23조(준용)</p> <p>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, 접수처리 방법 등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제2장의 내용을 준용한다.</p>	<p>－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의 내부자신고세칙 제도 준용</p>
(신설)	<p>제22조(징계의 감면)</p> <p>임직원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－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</p>
부칙(제정) ~ 부칙(2) (기재 생략)	부칙(제정) ~ 부칙(2) (현행과 동일)	
(신설)	<p>부칙(3)</p> <p>이 세칙은 2013. 10. 로부터 시행한다.</p>	<p>－ 시행일</p>
별지 서식 (기재 생략)	별지 서식 (현행과 동일)	

내부자 신고 세칙

제 정 : 2011. 1.28
1차 개정 : 2012.10.15
2차 개정 : 2013. 2.22
3차 개정 : 2013.10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세칙은 내부통제규정 제10조 및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제6조와 관련, 내부자 신고 및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자 신고제도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,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내부자”라 함은 임직원(파견직원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2. “운영조직”이라 함은 내부자 신고 및 공익신고의 접수, 조사, 교육, 규정의 제개정 등 내부자 신고제도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조직을 말한다.
3. “비밀보장 의무자”라 함은 내부자 신고 및 공익신고의 내용을 접수, 조사하는 자 및 직간접적으로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의 내용 등을 알게 된 내부자를 말한다.
4. “공익침해행위”, “공익신고”, “공익신고자”, “불이익조치”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행위 또는 사람을 뜻한다.

제3조(운영조직)

내부자 신고 및 공익신고제도를 전담할 운영조직은 법무실로 한다.

제2장 내부자 신고제도

제4조(내부자의 신고의무)

- ① 내부자는 제5조에서 정한 임직원의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(임직원 및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신고대상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법무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을 위반하여,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실장이 인사 담당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신고대상 행위)

내부자 신고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횡령, 배임, 공갈, 절도, 금품수수, 사금융알선, 저축관련 부당행위,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
2.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
3.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행위
4.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

제6조(신고방법)

- ① 신고자는 홈페이지, E-Mail, 전화, Fax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되, 신고 내용을 6차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.
- ② 법무실장은 익명 신고 접수·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접수사실의 은행장 앞 보고)

법무실장은 내부자 신고 접수시 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신고 내용의 삭제 등)

① 법무실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신고의 내용이 근거없이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다.

② 다만,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별도 기록하여 보관하고, 은행장에게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조사)

① 법무실장은 은행장에게 내부자 신고 접수 사실을 보고한 즉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법무실장이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 대상자 및 부서에 자료의 제출,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조사 업무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, 조사과정에서 내부 통제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자료 제출, 출석 및 진술 의무)

① 제9조 제2항의 조사대상자 및 부서는 요청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 및 진술을 할 의무가 있다. 다만,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, 출석 및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.

② 조사대상자 및 부서가 제1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자료의 제출, 출석 및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

한다.

③ 법무실장은 제10조 제2항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자료의 제출, 출석 및 진술의무의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.

제11조(조사기간)

① 내부자 신고의 조사는 최초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마무리하여야 한다.

②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조사기간의 연장은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조사결과의 처리)

① 조사가 완료되면 법무실장은 해당 조사 결과를 은행장에게 보고하고, 필요시 인사담당 부서에 관련 내규에 의한 징계를 의뢰한다. 또한 조사결과 내부 통제규정 제10조 및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제6조에 따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취한다.

② 법무실장은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 부점장에게 불합리한 업무절차 등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신고자에 대한 통보)

법무실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4조(비밀보장 등)

① 비밀보장 의무자는 내부자 신고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신고

내용 및 신고자의 신원 등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(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법무실장은 신고에 따른 조사시 담당자 및 조사자에 대하여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(별지 서식)를 징구하여야 하며, 담당자 및 조사자는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법무실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인사담당 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5조(신고자 보호)

① 은행은 내부자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법무실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점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법무실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부점장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진술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진술의 내용 등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임직원을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한다.

⑤ 법무실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인사담당 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6조(신고자 우대 및 보상)

① 은행장은 신고 내용이 발생가능한 은행의 손실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담당 부서에 신고자에 대한 표창,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인사담당 부서는 표창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시 이연지급 등의 방식으로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7조(교육)

법무실장은 내부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내부자 신고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8조(기록관리)

법무실장은 내부자 신고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5년간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3장 공익신고자 보호제도

제19조(비밀보장 의무)

① 임직원은 공익신고자 및 관련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

1. 공익신고자 및 관련자의 인적사항
2.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

②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한다.

제20조(불이익조치 등의 금지)

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임직원이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

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법무실장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를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임직원에게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.

제21조(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)

① 공익신고를 한 임직원이 전출·전입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공익신고를 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,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22조(징계의 감면)

임직원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제23조(준용)

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, 접수·처리 방법 등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제2장의 내용을 준용한다.

부 칙 (제정)

이 세칙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)

이 세칙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)

이 세칙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3)

이 세칙은 2013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]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(제14조 관련)

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

법무실장 귀하

본인은 내부자 신고제도에 의한 신고를 접수·조사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내규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.

또한, 업무 처리 및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 일체에 대하여 행내외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,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내규에 따른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소속 :

직위 :

성명 : (인)